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노사정 합의 불발 아쉬워 대타협은 나라 구하는 길”

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위기시 상생·협력문화 더욱철실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변화 반영”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불참으로 무산된 데 대해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노·사·정 합의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의 일인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 위기 극복 노력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 데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노·사·정)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잠정 합의안이 나온 데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사회적 합의로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나온 잠정 합의안에 대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사정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자는 뜻이 담겨있다.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노사의 고통 분담과 상생 협력 의지,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방역 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도 포함돼 있다”고 평가한 뒤

“이와 같은 합의 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 관계도 발전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위기 시기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는 더욱 절실하다. 서로 양보하며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통적 노동시장과 일자리가 급격히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추진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체육계 폭행사건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다.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해고·실직자도 노조가입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제출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노동권 강화 등 3개
전교조 사실상 합법화 절차 가능

비준안서 강제노동철폐협약 제외
“통상 리스크 해소, 국익 위한 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 노동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3개 협약 국회 비준을 다시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제34차 국무회의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이달 2일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이 올해 안으로 국회 동의절차를 마치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날 심의·의결된 비준안은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이다.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190개 협약 중 8건이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으나, 핵심협약 중 아동노동금지과 균등대우 관련 협약 4개 협약만 비준한 상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ILO 회원국 187개국 중 146개국, OECD 36개 회원국 중 32개국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같은 내용의 핵심협약 비준안을 관련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이 개정되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지위·감독자’를 제외한 5급 이상 실무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 해직 교원이 참여하는 전교조도 사실상

합법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과 상충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다만, 이번 비준안에는 강제노동 금지 관련 ‘강제노동철폐’(제105호) 협약은 제외됐다. 해당 협약은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처벌로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내 형벌체제와 상충한다. 우리 형벌체제는 실정법을 위반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정경행위 참가 등에 대해 징역형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어서다. 협약 취지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징역형 자체를 삭제하거나 금고형으로 전환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선 금고형을 주로 과실범에게 부과하는 우리나라 형벌 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그간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지만, 경영계는 노사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노동계 쪽으로 쏠릴 수 있다며 완강히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부 환경 변화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더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인천공항에 ‘엑스레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장에 농축산물 검역전용 엑스레이(X-ray) 설치를 가동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지난 2018년 8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검색을 실시해 왔다.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전용 엑스레이를 설치해 검색을 강화했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이날 인천공항을 방문해 검역전용 엑스레이 설치·운영과 국경검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항만을 통해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색과 차단이 중요하다”며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불법 휴대하거나 해외에서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해 국경검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의 돈육 또는 돈육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면 500만원~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국 축산물이나 돈육 제외 축산물의 경우 100~500만원 벌금이다.

/한용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국난극복 역사적 책임 이행에 최선”

이낙연, 당대표 출마 선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8·29 전당대회에 앞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한 뒤 당권 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난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위기 앞에 선 거대여당 민주당은 새로운 각오와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176석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7개를 가져간 데 따라 국정 운영에 막중한 책임이 필요하

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어느 경우에도 거대여당의 본부는 다하는 ‘책임 정당’이어야 한다. (또) 모든 과제에 성과로 응답하는 ‘유능한 정당’, 국민과 역사 앞에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는 ‘검소한 정당’, 내외정세와 지구환경, 인간 생활과 산업의 변화를 직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공부하는 정당’, 미래 세대에 희망을 드리고 신뢰받는 ‘미래 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차기 민주당은 정부와 전례 없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중첩된 위기는 당정협력의 새로운 강화를 요구한다”며 당·정·청 관계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가 4년 차를 맞은 데 따른 레임덕 위기뿐 아니라 당·청 갈등이 생길 것에 대해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영훈 기자

독도 주변해역 해양생태계 개선 시행

해수부, 성게 12.8톤 제거

해양수산부는 갯녹음으로부터 독도의 해조숲을 보호하고 해양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도 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생태계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갯녹음은 연안암반지역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흰색의 석회 조류가 달라붙어 암반 지역이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바다사막화’라고도 불린다.

2018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도에는 약 322종의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생물의 서식지 역할을 하는 감태, 대황 등 대형 갈조류를

포함하여 약 68종의 해조류가 독도에 서식하고 있어 단위면적당 생물량이 국내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독도 주변해역에서 해조류를 섭식하는 동근성게의 이상증식과 암반을 하얗게 덮는 석회조류의 확산으로 갯녹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해양생물의 다양성 감소와 해양생태계 균형의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경상북도(울릉군) 등과 함께 2015년부터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약 12.8톤의 성게를 제거하여 최근 성게 밀도가 확연히 줄어드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용수 기자